

3% 고물가...가격안정자금 무기한 투입

“농산물 가격 3월하순부터 둔화, 아직도 높아”
 “1500억원 이상 특단지조치중이나 마음 무거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수산물 가격 등 물가 상승 문제 대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월 수출액 전년 대비 3.1% 증가, 무역수지 49억 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의 최고 실적을 내는 등 경기 지표 개선울 설명하면서도 국민의 체감 물가는 높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환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환인

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투입하겠다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

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저온과 서리 등 기후변화 문제가 ‘뉴 노멀’이라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과수원’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 “25cm넘으면 불법 ‘인태’ 선거법 개정해야”

시민단체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정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선거법을 규제 중심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성명을 나타내는 정보 없이 25명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일 때만 허용된다.

회화·풍선·간판·현수막·광고물 등 시설물 설치도 금지되며, 5명 이상이 행렬을 이뤄 거리를 행진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

개인의 경우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안에 마이크 등 확장장치 없이 가로·세로 길이가 25cm를 넘지 않는 소품 1개를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정치적 표현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돼야 하며, 과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요구할 수도,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진료는 언제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째인 2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상 투표 시작... 2050명 참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가 2일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상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308척의 선박에서 승선중인 선거인 2050명이 참여한다.

선상투표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인 2821명 중 2586명이 투표해 91.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월드팩스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거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보내지며 선거일 개표에 포함된다.

월드팩스는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합·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팩스밀리다.

이번 선상투표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된다.

재판 출석 이재명 “야당대표로 선거집중 못해 안타까워”

후 “정치검찰이 원했던 결과 아닌가 생각”

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 고 국가에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달라”며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하며 허리를 숙였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남도 출석할 것

인지’, ‘출석 일정은 재판부가 정했는데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입장했다.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이 대표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재차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제소환에 대한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줄곧 재판부를 향해 공판기일 변경 및 변론 분리 등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완강한 뜻을 밝혔다.

울산 찾은 문재인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운명 좌우하는 선거”

“민생 어렵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도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울산을 찾아 보수 강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경숙 여사와 함께 울산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보성학교 전시관을 찾아 이 지역 총선 출마자인 김태선 후보를 격려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 대해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라며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조선산업을 되살렸듯이 김 후보는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그의 당선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주시면 (성 선행 서훈을 위해)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일산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중구로 이동해 오상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국자정원을 찾은 시민들 설명을 들은 문 전 대통령과 김 후보는 보성학교 설립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성세빈 선생의 친손자 성낙진 씨와 만나 성세빈 선생 서훈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선각자이자 독립운동가이고 보성학교를 통해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셨는데, 정작 성세빈 선생은 아직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해서 섭섭하시겠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김 후보는 “개인적으로 성세빈 선생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당선시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해 주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4월 5~6일)과 본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지난 달 도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율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호기자

서울대병원 비상경영...“병원 어려움 심각”

“비상진료체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 이 전직 임원의 병원 이탈후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2일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김 병원장은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 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서울대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예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상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널리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병원 이 대한민국 필수 의료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전체 병동 중 6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10개 병동을 폐쇄했다.

폐쇄된 병동에는 외과, 내과, 신장내과, 응급실 단기 병동, 암 병원 별관 등이 포함됐다. 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000억원 규모로, 기존 보다 2배 늘렸다.

서울아산병원은 일반병동 56개 중 9개를 폐쇄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일반병동 19개 중 2개 병동을 비웠고 병동에 따라 통합 운영 중이다. 간호 인력도 통합 병동으로 재배치돼 운용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한시적으로 75개 병동 중 6개 병동을 3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간호사를 비롯한 일선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도 시행 중이다.

북도발 美 폭격기 떴다...한미일 공중훈련

미 B-52H 폭격기 포함 한 F-15K·일 F-2 등 참가

북한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오늘(2일), 미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를 찾은 가운데 한미일 3국이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한미일이 오늘(2일)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제주 동남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올해 들어 첫 번째로 실시됐다. /뉴시스

한동훈, 충청서 ‘세종 국회의사당’ 약속

“한국의 워싱턴 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8일 앞둔 2일 충청 지역을 찾아 국회의사당 세종이전 등 지역 발전 공약을 강조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충청권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지원유세에서 ‘국민택배’ 형식으로 국회의사당의 세종이전 이전 공약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국회를 완전히(세종으로) 옮기면, 워싱턴D.C. 같은 곳이 충청에, 세종에 생기면 그 주위가 발전하겠나만 하겠다”라고 단문했다.

의도의 구매 정치를 완전히 해소하고 새로 출발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대한민국 입법 정치의 완전한 처음이자 끝, 전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를 겨냥해 “그냥 분점처럼 서울에 다 있고 지역민들 분위가 맞추려고 분점 형식으로 건물 특색 맞게 지어놓은 것, 그게 진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싶은 세종시민들 생각에 맞는 것이냐”며 “공무원들이 길에서 버는 시간만 많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새 중심이 충청·세종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새출발하는 것”이라며 “여